광주·전남, 수도권 기업 유치 부진 실태와 문제점

"지방 이전 지원금 지역별 차등화 해야"

충남 342억·강원 207억… 광주 20억·전남 14억 불과

인프라 부족, 우수 인력·기술력 확보 어려움 주원인

수도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전력투구해오던 전남도는 올 초 충분히 잡을 수 있었던 대어를 한 마리 놓쳐버렸다. 인천지역 한 특수크레인 업체를 목포에 유치하는 조건으로 40억 원의 보조금을 주기로 했으나, 이 가운데 국비로 충당할 수 있는 2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20억 원을 전남도가 끝내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남도의 수도권 기업유치가 지지부진한 것은 바로 이처럼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상태에서 비롯된 바가 크다. '지방이전 수도권기업 지원제도'에 따라 이전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재정상태가 탄탄해야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전국 16개 광역 시·도 가운데 꼴찌수준인 전남도로서는 보조금 마련에 애를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처음부터 전남으로 이전하려는 기업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여기에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수도권 기업의 지역 이전은 더욱 어렵게 됐다.

정부가 실시하는 '지방이전 수도권 기업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 이전지역을 물색하는 수도권 기업들의 대다수가 '같은 값이면' 경북이나 충청권·전북 등 수도권과 가까운 지역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전 예정기업들로서는 경북이나 충청으로 가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는 만큼 이왕이면 수도권과 가깝고, 교육여건이나 발전 가능성이 큰 지역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특히 전남의 경우 해마다 심화하는 '인구 노령화 및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 기업들이 이전해오더라도 필요한 기능·전문인력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수도권 기업이 이전을 기피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이전 수도권 기업들에 대한 지원제도가 실시된 지난 2004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4년 6개월 동안 비수도권인 13개 시·도에 이전한 191개 기업 가운데 광주에는 12%인 23개, 그리고 전남에는 1개가 이전하는데 그쳤다. 가장 많은 곳인 강원도 53개(27.7%)와 비교할 때 크게 저조한 실적일 뿐만 아니라 차순위인 충남 52개(27.2%)·전북 36개(18.8%)·충북 24개(12.6%) 등에도 훨씬 못 미친다.

또 수도권 기업유치 실적 등을 토대로 한 중앙정부의 기업지방이전지원금도 전체 1천183억2천만 원 가운데 광주는 1.74%인 20억6000만 원을 지원받는데 그쳤고, 전남은 지난 2006년 단 한차례 14억 원(1%)을 지원받았을 뿐이다.

■ 지방에 이전한 수도권 기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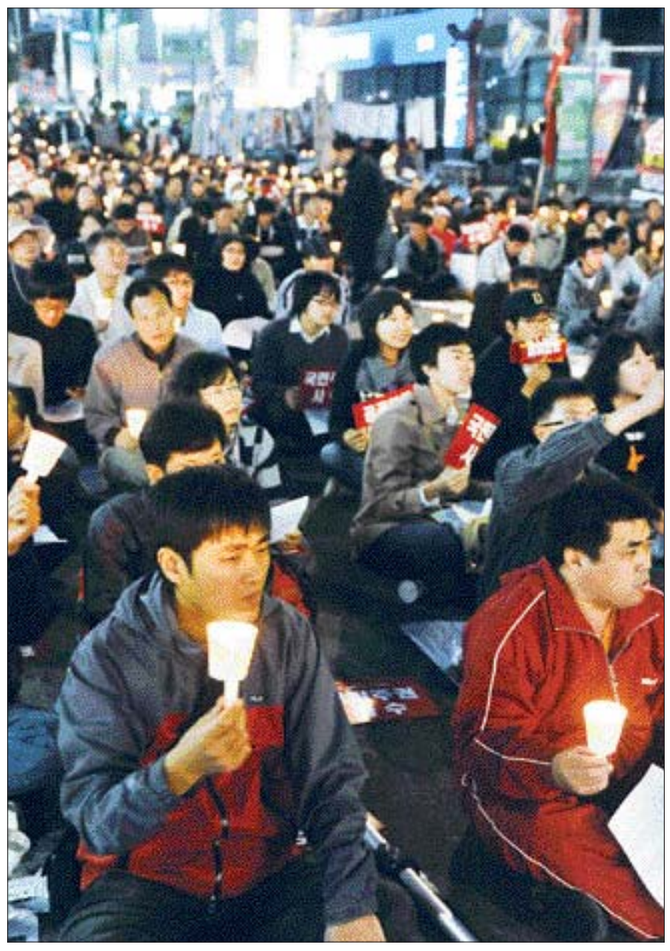
(2004.1~2008.6)

지역	개수(%)	지원금(%)
강원도	53개(27.7)	207.5억원(17.5)
충남	52개(27.2)	342억원(28.9)
전북	36개(18.8)	197억원(16.6)
⋮	⋮	⋮
광주	23개(12.0)	20.6억원(1.7)
전남	1개(0.5)	14억원(1.2)
총	191개	1,183.2억원

결국, 수도권 기업들이 이전 대상지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전남은 '투자 우선순위'가 뒤로 밀릴 수밖에 없으며,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선 정부지원을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건철 전남발전연구원 기획경영실장은 "최근 수도권 규제가 대폭 완화됨으로써 유망기업을 지역으로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갈수록 사라지게 됐다"며 "그럼에도 기업들의 지방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법인세 면제, 기업이전비용 정부 지원을 비롯 '지방이전 수도권 기업 지원금' 배정기준을 차별화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두달만에 타오른 촛불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는 지난 1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국민주권 수호, 교육·의료·공공부문 사유화 저지를 위한 촛불집회'를 개최했다. 민노총 조합원 400여명이 참가한 이날 촛불집회는 지난 8월 17일 '100회 기념 촛불집회' 이후 두 달 만에 열렸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영암서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

4~7일까지

동북아 3개국 지방정부의 발전과 우호증진을 위해 매년 개최되는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가 4일부터 7일까지 영암 호텔현대에서 개최된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주최로 열리는 올해 교류회의에는 3개국 95개 지방정부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해 '지역활성화를 통한 발전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갖는다.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는 1999년부터 3개국 지방정부가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신뢰를 다지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서울(2회)과 강원도(1회)에서 열린 바 있다.

사흘 동안 이어지는 교류회의 본회의에서는 기조강연과 3개국 대표의 주제발표, 9개 지방정부의 신도시 건설·관광·환경·국제행사 유치 분야의 지역활성화 사례발표, 토론회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는 예비심사를 거친 12개 자치단체 사례에 대해 2차 심사를 통해 우수지자체를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교류회의 참석자들은 영암의 왕인박사 유적지와 도갑사, 순천의 낙안읍성, 함평 국향대전 등을 둘러보는 문화유적 시찰도 할 예정이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퇴직공무원 취업 제한 법 개정안 발의

민주당 김동철 의원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1일 공직자가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기업이나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행정부, 국회 등 헌법기관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업무연관성의 범위를 법률에서 부서별로 직접 규정하되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조사 및 감독권이 있는 기관은 업무연관성을 보다 엄격히 규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또 행정안전부 장관이 매년 12월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거나 외형 거래액이 150억원 이상인 회사 등 취업이 제한되는 회사나 기관을 확정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지역 발전법·F1 통과 최대 관심

문화수도·SOC 예산 확보 시급

■ 예산국회 돌입… 챙겨야 할 지역법안·예산

국회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 질의가 끝나는 7일 이후 본격적인 내년 예산 및 법안 심의에 돌입한다.

10년 만의 정권 교체 등에 따라 여야의 입장이 바뀐 가운데 실시되는 18대 국회의 예산 및 법안 심의는 광주·전남지역 미래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예정이어서 그 어느 때 보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법안 및 예산 등에 대해 조명해본다.

◇관심 법안=우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대체하는 지역발전특별법의 국회 통과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정부는 다음달 지역발전특별법을 국회에 상정한다.

문화콘텐츠진흥원·CT연구원 유치 주목

전남 미래 견인할 조선산업 지원도 절실

지역발전특별법은 광역경제권 계획의 법적 근거가 되는데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광역경제권 구상이 영남지역에 편중됐다는 점에서 대폭적인 수정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광주·전남지역의 경제적 낙후를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지난 17대 국회에서 고배를 마신 F-1 특별법의 18대 국회 통과 여부도 관심사다. 일단 F1 특별법의 이번 정기국회 통과 전망은 밝다. 국회 국제경기 특별위원회에 F1 특별법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국회 국제경기 특위는 자체 심의를 통해 F1 특별법을 곧장 법사위로 넘길 전망이다. 2011 대구 세계국제육상선수권대회와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도 국제경기 특위에 포함돼 있어 F1 특별법에 대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협조도 예상된다.

또 정부의 세제개편법안 등도 지방재정에 크게 부담이 된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지역 예산=내년도 광주·전남지역 국고 예산 확보는 당면 현안이다. 당장 광주 문화수도 관련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대폭 삭감됐다.

여기에 광주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 조성, LED 조명도시 조성, 첨단부품소재 산업 육성 등의 신규 사업 예산이 미반영됐다.

이번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최소한의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

전남지역 SOC 확충 예산도 문제다.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 신지~고금간 연도교 건설, 영광~해제 영광대교 건설, 압해~화원간 연결도고 건설, 여수공항 확장 사업 등의 사업 예산이 쥐꼬리 만큼 배정되거나 아예 미배정 된 상태다.

또 호남고속철도의 조기 완공을 위한 예산 확보도 시급한 과제며 여수세계박람회 연계 SOC 예산 확보도 중요하다.

◇기타 현안=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할 예정인 문화콘텐츠진흥원의 향배도 관건이다. 유인촌 문화부 장관이 문화콘텐츠진흥원의 나주 이전에 대해 말 바꾸기에 나서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핵심 연구기관인 CT 연구원의 유치 문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또, 광주·전남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문제에도 정치권의 관심이 요두되고 있다.

특히, 전남의 미래를 견인할 전남지역 조선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여부도 정치권의 관심이 절실하다.

농식품부가 제동을 걸고 있는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